

통합 주청사 ‘판도라 상자’ 열렸다 ‘솔로몬의 지혜’ 찾아라

청사 이전은 생존의 문제... 정치공학 아닌 미래 경쟁력 고려해야
시·도·정치권 합의 못하면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물거품 될수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청사 위치’라는 압초를 만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위치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광주가 주청사가 돼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전남 3차 간담회에서 도출된 ‘전남 주청사’ 기류에 대한 지역 내 폭발적인 반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만큼 휘발성이 높은 현안이자 시·도민 갈등까지 부를 수 있는 현안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도도 통합청사 위치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통합이 무산됐다.

◇왜 ‘판도라의 상자’인가= 강 시장이 통합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사 위치 문제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비유했다.

광주 시민들에게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동이 아닌, 도시의 성쇠가 달린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 광주 동구에서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

도청 주변 상권은 급격히 붕괴했고, 도심 공동화 현상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난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 후 출범할 특별시의 본청마저 전남으로 간다면, 광주는 ‘껍데기만 남은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강 시장은 “도청 이전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통합청사마저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확고한 정서”라며 “이는 논리나 효율성을 떠나 지역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의 선부분 ‘빅딜’ 시·도= 이번 논란의 불씨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3차 간담회에서 지퍼했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광주가 통합시의 명칭을 가져가는 대신, 실질적인 청사는 전남에 양보하자”는

식의 이른바 ‘빅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무시한 정치 공학적 선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회의 막판 다수의 의원이 이석한 상태에서 소수 인원이 모여 지역의 백년대계인 청사 위치를 ‘가안’ 형태로 결정한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지역 국회의원은 “통합의 목적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기관을 하나씩 나눠 갖는 식의 기계적 균형 논리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중심인 광주를 배제하고 서쪽 끝인 무안에 주청사를 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도=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경고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사 문제만큼은 예민하니 ‘1청사, 2청사’로 위계를 나누지 말고 ‘광주 상무청사, 전남 무안청사’ 등으로 지역 명을 붙여 대등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청사 위치가 결정되는 순간 한쪽은 ‘분류’, 다른 쪽은 ‘지류’로 인식되어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통합 무산 위기 역시 청사 위치를 둘러싼 이견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광주·전남특별시 주청사의 소재지를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주 청사 소재지 문제는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감, 지역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간담회’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위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균형발전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의회는 주청사를 전남도의 행정수도인 무안군으로 확정하고 청사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통합청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 공청회에서도 무안군민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취지에 맞게 주청사 위치는 전남도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솔로몬의 지혜’ 가능할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특별법 발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충남과의 속도 경쟁 때문에 30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강 시장은 “청사 소재지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통합 후 조례로 정하거나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묘안이 있을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시장 집무실을 광주, 무안, 순천 등에 분산 배치해 며칠씩 순환 근무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지역 여론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내일 열릴 4차 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는 쉽

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 주청사’를 고수하는 강 시장과 ‘전남 주청사’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어렵게 쌓아온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통합의 성패는 지역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시·도민의 실질적인 이익과 미래 경쟁력을 위해 얼마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동의 위해 시·도의회에 긴급의안 제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각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긴급 의안’ 제출을 결정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 (가칭) 안건을 긴급 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96회 임시회 개회일인 오는 30일 이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광주시는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3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양 시·도는 아직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그 사유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긴급 의안 형태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회기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해왔던 것과는 달리, 양 시·도 통합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데다 명칭과 청사위치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긴급 의안 제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 의안은 단순히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기 전까지 의안 제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어려움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56명으로, 민주당 전남도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을 채택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

합 특별법 발의 전 양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는데, 특별법 발의 시점이 오는 29일 혹은 30일로 예측되면서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로 가름되는 의회 동의 절차가 법안 발의보다 선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특별법이 발의되면 특별법안을 첨부해 동의안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보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 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 조직 개편안은 이번 임시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심사보류 결정을 존중하고 행정통합 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28일 22개 시·군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의회, 도의회에 ‘행정통합 공동 TF’ 구성 제안

명칭 등 공동 논의로 해법 모색

광주시의회는 26일 전남도의회에 행정통합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의회 광주·전남 통합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을 비롯한 행정통합 시의회 대응 TF 의원들은 이날 전남도의회를 찾아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통합특별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양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논의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함께 전달된 특별법 수정안에는 통합 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행 광역의원 수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광주지역 과소 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정부직 부시장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무화,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절차 도입, 의회 예산 편성권 독립 등도 수정안에 반영됐다.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자치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조정교부금 특례, 공무원 통합 전 근무지 보장 등 조항도 담겼다.

시의회 대응 TF 관계자는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6·3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만큼 광주 지역의원 정원 확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향후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시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통합 논의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일반대학원	박사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 전형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학부 편입 추가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일반편입(3학년)	학사편입(3학년)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6. 1. 28.(수) ~ 2. 5.(목)
- 전형일: 2026. 2. 6.(금)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